

■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 분석 보도자료 (2017. 4. 6.)

국민의 91.7% “한국 사회에서 출신 학교로 인한 차별이 여전히 있다”

- ▲ 2016년 12월 31일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를 발표함.
- ▲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2.4%로, ‘일부 존재한다’는 의견 비율 27.1%와 합치면 89.5%의 국민이 학력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함.
- ▲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5.3%로, ‘일부 존재한다’는 의견 비율 26.4%와 합치면 무려 91.7%의 국민이 출신대학(학벌)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함.
- ▲ 학벌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53.8%), 심화될 것이다(29%) 순으로 응답하여, 82.8%의 국민이 학벌주의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음.
- ▲ 국민들은 학력·학벌 경쟁 속에서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여, 2016 사교육비 통계는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 이에 학력과 학벌로 인한 입시,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20대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함.
- ▲ 하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19대 대선 후보들 중 심상정 후보만이 학력·학벌 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문재인 후보는 ‘기업 블라인드 채용 확대’라는 소극적 방안을, 홍준표 후보는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대담집에서만 언급하고 있음.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는 그마저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화 할 것을 촉구함.

2016년 12월 31일,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일반 및 각종 교육 문제나 이슈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교육 당국의 정책 수립 및 개선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전국 성인남녀이며 총 39,576,071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모집단의 0.0051%)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후 인구구성비에 따라 표집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 ③ 교육과정 운영, ④ 학생생활,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⑨ 교육관 등 9개 영역, 총 52문항(기존 42개, 신규 10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여기에서 다루는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등의 설문 문항은 ⑨ 교육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2.4%로, ‘일부 존재한다’는 의견 비율 27.1%와 합치면 89.5%의 국민이 학력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함.

먼저,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질문>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62.4%),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27.1%), 잘 모르겠다(6.0%),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4.6%)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즉, 89.5%의 국민이 대학 졸업장 유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학력 차별 즉, 최종 학력에 따른 여러 유형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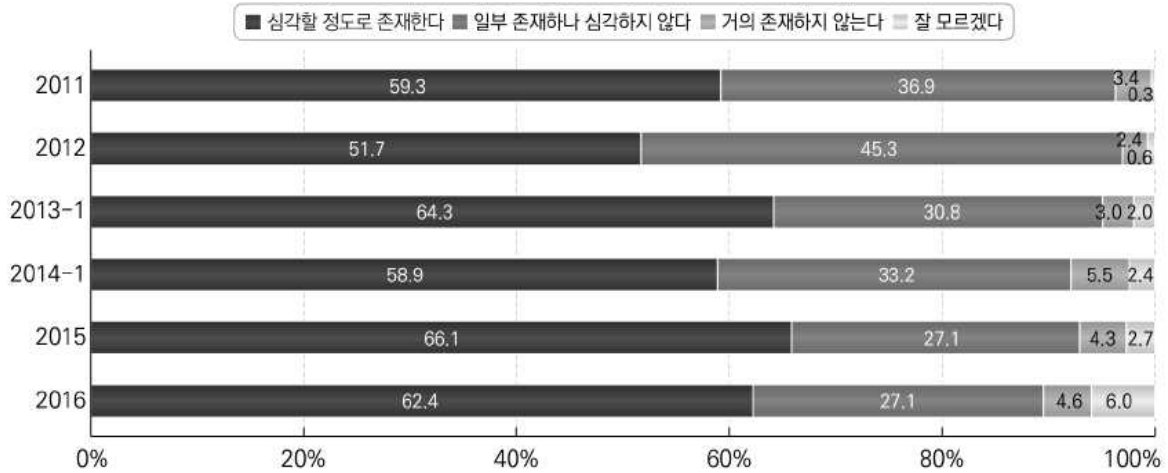
[표 1]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6)

(단위 : 명(%))

대학졸업장 유무 차별성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졸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1247 (62.4)	18 (39.1)	319 (64.7)	787 (62.5)	123 (61.2)	1321 (66.1)	1,178 (58.9)	1,285 (64.3)	930 (51.7)	890 (59.3)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542 (27.1)	15 (32.6)	110 (22.3)	356 (28.3)	61 (30.3)	541 (27.1)	664 (33.2)	615 (30.8)	816 (45.3)	554 (36.9)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91 (4.6)	5 (10.9)	19 (3.9)	58 (4.6)	9 (4.5)	85 (4.3)	110 (5.5)	60 (3.0)	44 (2.4)	51 (3.4)
잘 모르겠다	120 (6.0)	8 (17.4)	45 (9.1)	59 (4.7)	8 (4.0)	53 (2.7)	48 (2.4)	40 (2.0)	10 (0.6)	5 (0.3)
계(%)	2,000 (100.0)	46 (100.0)	493 (100.0)	1260 (100.0)	201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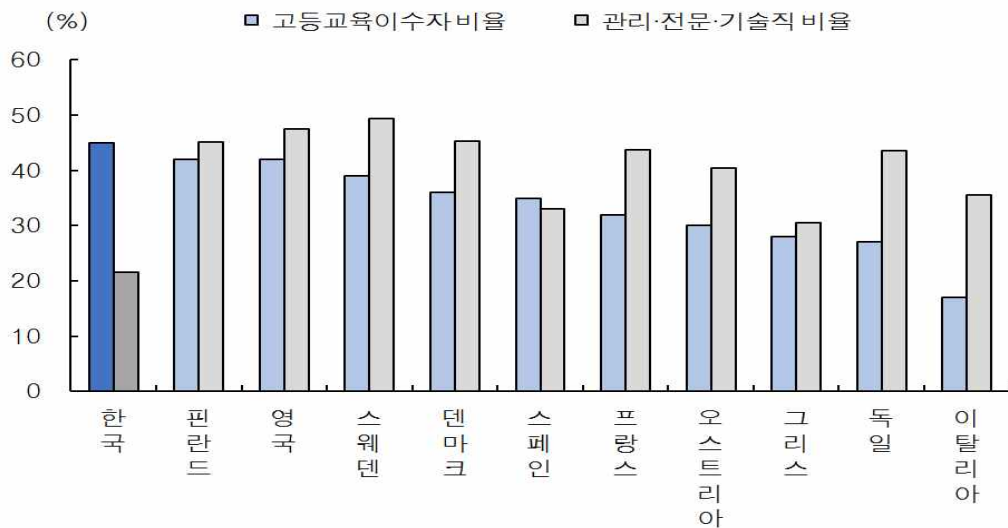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간의 결과를 놓고 봐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최대 5.5%에 그쳤습니다.

[그림 1]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6)



이러한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로 나타나는데, 2005년 51%에서 2010년 65%, 2014년 6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25세~34세)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은 68%로 OECD 최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학력 수준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흡수할 노동시장이 없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주요 국가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은 45%로 높지만, 전체 근로자 중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의 비율이 21.6%로 매우 낮은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실업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2] OECD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과 관리·전문·기술직 비율(2014)



주: 1)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은 만 2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6, 1쪽.

■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5.3%로, ‘일부 존재한다’는 의견 비율 26.4%와 합치면 무려 91.7%의 국민이 출신대학(학벌)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함.

두 번째,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질문> 현재 한국사회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65.3%),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26.4%), 잘 모르겠다(4.7%),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91.7%의 국민이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학벌 차별 즉, 같은 대졸 학력을 가졌어도 SKY, 인서울, 지방대 등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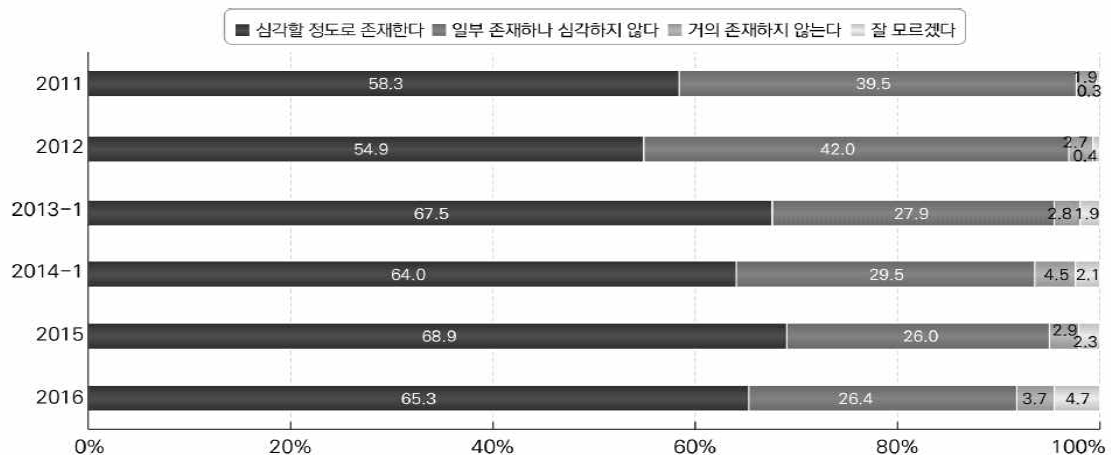
[표 2]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6)

(단위 : 명(%))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1306 (65.3)	17 (37.0)	313 (63.5)	843 (66.9)	133 (66.2)	1,377 (68.9)	1,279 (64.0)	1,349 (67.5)	989 (54.9)	874 (58.3)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528 (26.4)	17 (37.0)	124 (25.2)	330 (26.2)	57 (28.4)	520 (26.0)	590 (29.5)	557 (27.9)	756 (42.0)	593 (39.5)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73 (3.7)	4 (8.7)	24 (4.9)	39 (3.1)	6 (3.0)	57 (2.9)	90 (4.5)	56 (2.8)	48 (2.7)	28 (1.9)
잘 모르겠다	93 (4.7)	8 (17.4)	32 (6.5)	48 (3.8)	5 (2.5)	46 (2.3)	41 (2.1)	38 (1.9)	7 (0.4)	5 (0.3)
계(%)	2,000 (100.0)	46 (100.0)	493 (100.0)	1260 (100.0)	201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간의 결과를 놓고 보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최대 4.5%에 그쳤습니다.

[그림 3]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6)



학벌 차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학력 차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심각한 학벌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같은 수준의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이름에 따라 채용시장이나 이후 진학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대학 중심의 파벌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지방대에 대한 차별로 지방 고교 출신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년,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로스쿨에서조차 입학 시험 과정에서 특정 대학에만 유리한 점수를 주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 학벌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53.8%), 심화될 것이다(29%) 순으로 응답하여, 82.8%의 국민이 학벌주의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음.

다음은 학벌주의의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3.8%,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29.0%,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12.5%,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4.9%로 나타났습니다. 즉, 82.8%의 국민이 학벌주의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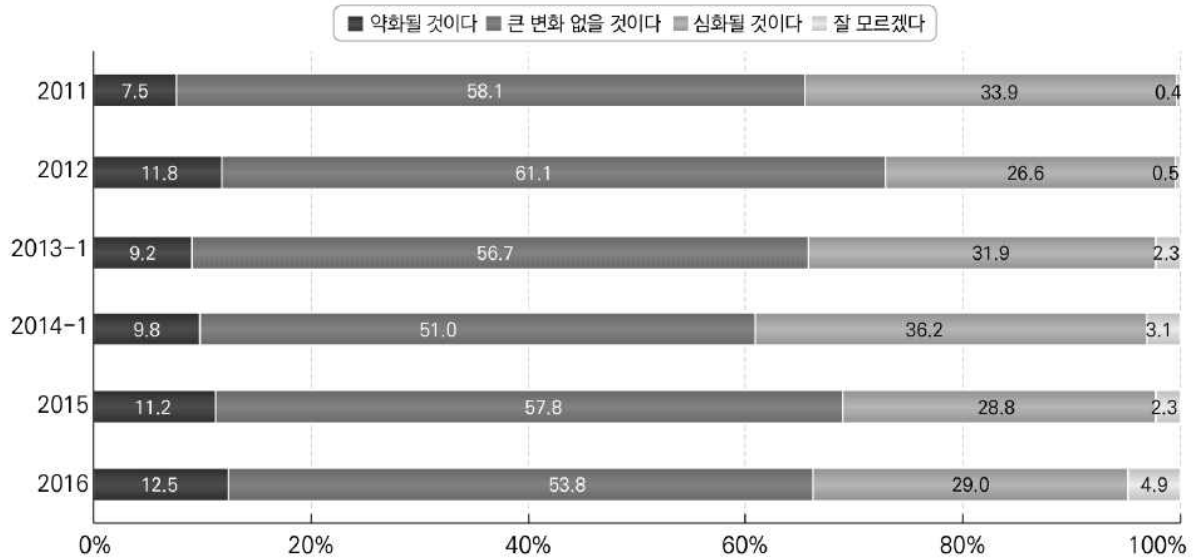
[표 3] 학벌주의 대한 전망(2011-2016)

(단위 : 명(%))

학벌주의 전망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약화될 것이다	249 (12.5)	8 (17.4)	70 (14.2)	146 (11.6)	25 (12.4)	224 (11.2)	195 (9.8)	183 (9.2)	213 (11.8)	113 (7.5)
큰 변화 없을 것이다	1075 (53.8)	22 (47.8)	259 (52.5)	685 (54.4)	109 (54.2)	1,155 (57.8)	1,019 (51.0)	1,134 (56.7)	1,099 (61.1)	872 (58.1)
심화될 것이다	579 (29.0)	9 (19.6)	131 (26.6)	380 (30.2)	59 (29.4)	575 (28.8)	724 (36.2)	637 (31.9)	479 (26.6)	509 (33.9)
잘 모르겠다	97 (4.9)	7 (15.2)	33 (6.7)	49 (3.9)	8 (4.0)	46 (2.3)	62 (3.1)	46 (2.3)	9 (0.5)	6 (0.4)
계(%)	2,000 (100.0)	46 (100.0)	493 (100.0)	1260 (100.0)	201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도 2011년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학벌주의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늘어나고 있지만, 매우 적은 변화폭을 보여 학벌주의가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매우 심각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 4]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2011-2016)



■ 국민들은 학력·학벌 경쟁 속에서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여, 2016 사교육비 통계는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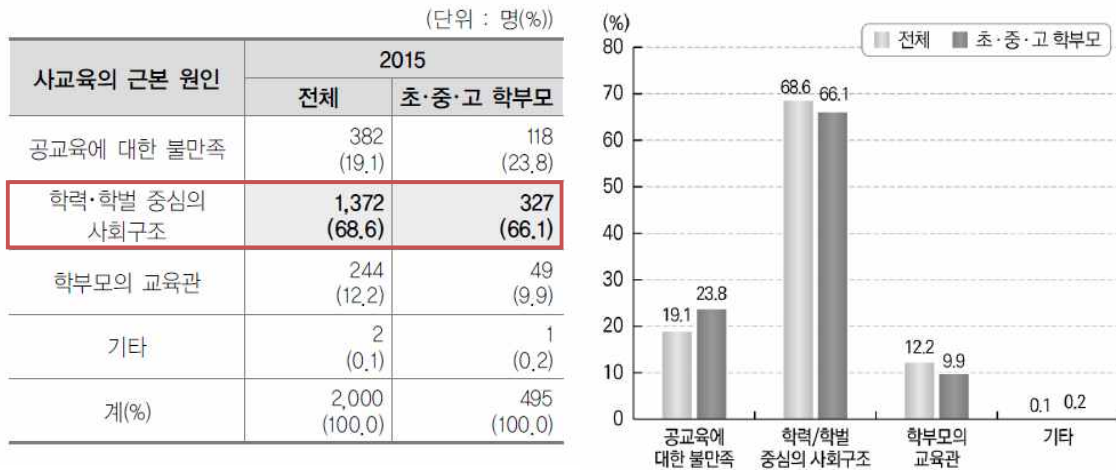
출신학교로 인해 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90%에 육박하고, 대학서열화나 학벌주의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은 학력·학벌 경쟁 속에서 자녀를 위한 사교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 의식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었는데 부동의 1위, 3위가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을 시킨다는 학부모 의식은 사교육문제 해결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해소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4] 사교육 증가의 원인

순 위	내 용	2009	2010	2011	2012	2013
1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4.15	4.20	4.20	4.10	4.10
2	특목고, 대학 등 주요 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	4.05~3.95	3.70	4.20	4.10	4.10
3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4.02	4.20	4.10	4.10	4.00
4	부모세대의 전반적인 학력상승 저출산 등 자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때문		4.10	4.00	3.90	3.90
5	사교육이 보편화 되어 있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		3.70	3.70	3.60	3.60
6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기 어려워서			3.70	3.60	3.50
7	과거에 비해 국민경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3.70	3.60	3.50	3.50
8	학교에서 자녀 학습관리를 개별적으로 잘해주지 못해서			3.30	3.30	3.30
9	학교에서 이뤄지는 진학준비, 상담, 정보제공이 부족해서			3.20	3.20	3.20
10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3.20	3.20	3.10
11	학교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되어서		3.90	3.00	3.00	3.00
12	학교의 학습 분위기, 학습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2.80	2.70	2.70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와 사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 문제 해결의 정답이 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68.6%가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뽑아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은 19.1%, 학부모의 교육관은 12.2%에 그쳤습니다.

[그림 5] 사교육 근본 원인



이러한 국민 인식은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사교육비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에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5.6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24.4만원을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전년 대비 1.2만원이 오른 것으로 증가폭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그림 6]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와 사교육비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했듯이 지금까지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교육비 통계가 나오자마자 여러 언론에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력·학벌중심의 사회 구조를 깨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정책 대안과 법·제도적 장치가 혁신적이고 강도 높게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이에 사교육걱정은 학력과 학벌로 인한 입시,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19대 대선 후보들 역시 이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함.

작년 고용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 채용관행 실태조사” 결과 입사지원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 1위가 “학력(출신학교)”이었습니다. 이는 출신학교가 기업의 채용에서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특목고 출신을 우대하는 대학입시전형, 로스쿨의 출신대학 차별 등 출신학교에 따른 입시 차별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능력 중심의 채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직자의 70%가 지원하는 민간 대기업이 채용에서 출신학교를 요구하고, 학력이나 학벌을 직무능력과 일치시켜 그 보상체계를 유지하는 한, 학력·학벌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학력과 학벌로 인한 입시,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김영란법이 그랬듯이 제도는 인식의 변

화를 추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4개의 관련 법안이 5개 정당 총 77명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20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초당적 자세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심의하여 법률로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19대 대선 후보들 중 심상정 후보만이 학력·학벌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기업 블라인드 채용 확대’라는 소극적 방안을, 홍준표 후보는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대담집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는 그마저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기에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국민들의 요구를 직시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4.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중(02-797-4044/내선번호 510)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